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2013. 2. 4 제134호

신상영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안전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 II.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 국내·외 사례
- III. 안전마을 만들기사업과 주민참여방안

요 약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은 주로 공공부문의 몫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 커지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관 주도의 대책만으로는 시민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도시안전을 이루려면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처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노력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조직화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따라서 안전마을 만들기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 사업추진의 지역밀착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구 및 환경적 동질성을 갖는 작은 공간단위이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사업들은 주로 관 주도의 지원사업

국내·외에는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방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국내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관 주도의 일회성 지원사업들로서 정작 지역주민들은 소극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도 산재되어 있는데 주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활동은 미약하고 중복이 심한 실정이다. 외국의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사업들은 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파트너십과 협업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지역공동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민참여방안을 개발하고 공공지원체계 마련 필요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서울시의 중점 프로젝트로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은 표준절차에 더하여 안전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행정부서 및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시 안전마을 만들기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주민참여를 전개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은 주민참여와 활동에 대한 촉진자·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라 주민참여방식을 차별화하도록 한다. 특히 주민참여방식은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과 물리적 환경개선형(H/W형) 사업 간에 차이가 있다. 셋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I. 안전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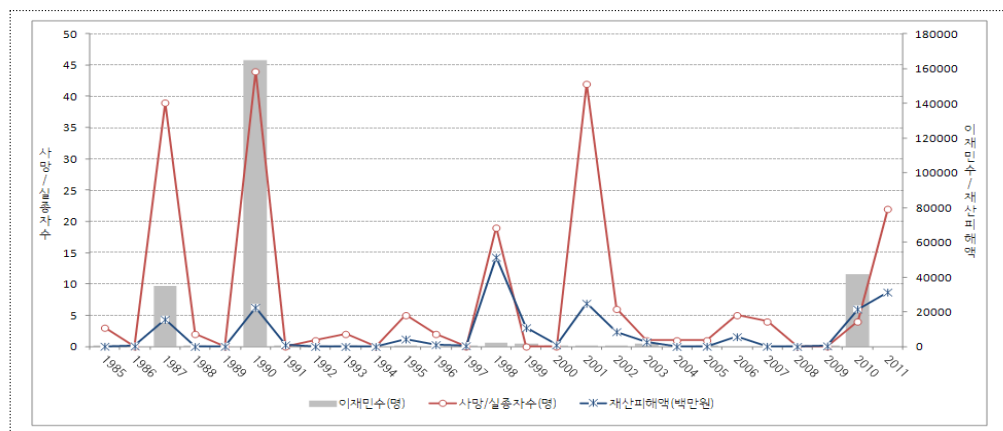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안전관리가 필요

- 관 주도의 대책만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욕구수준을 충족하는데 한계
 - 지금까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도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은 공공부문의 몫으로 간주
 - 도시가 커지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관 주도의 대책만으로는 시민안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걸쳐 섬세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수준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보다 섬세한 도시안전을 이루려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접근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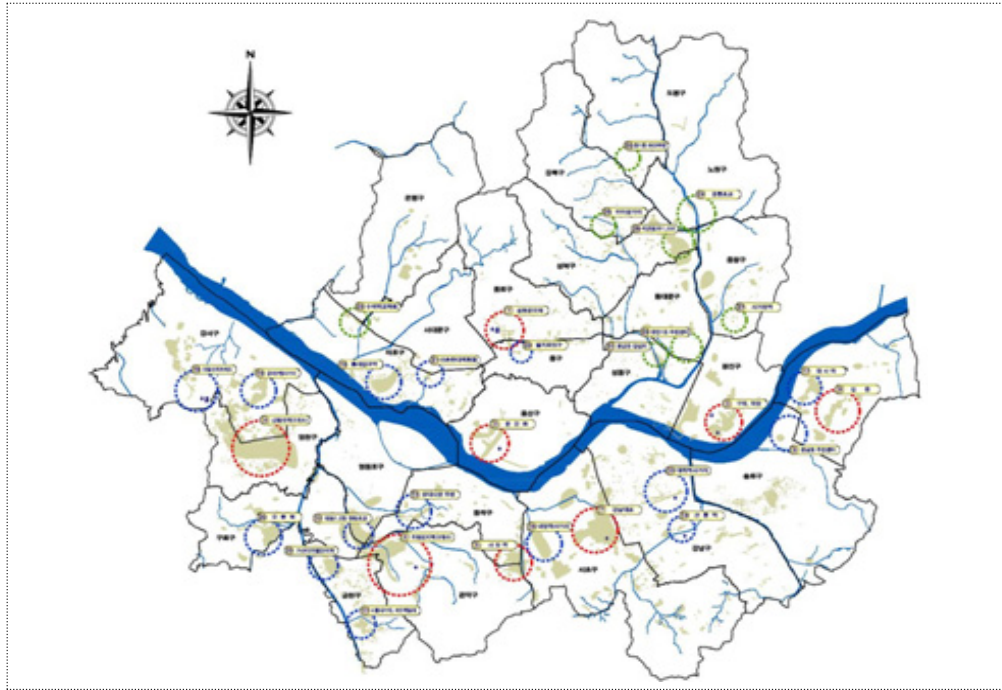
[그림 1] 도로 빗물받이의 관리상태와 침수피해 전경

- 지역주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관건
 - 서울시의 방재시설을 비롯한 각종 안전관리시설과 행정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도시공간의 고밀화·복잡화·노후화, 도시사회의 개인화·익명화·유대 약화, 공권력에 의한 통제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내재적인 취약성 (vulnerability)은 매우 높은 상황
 -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각종 위험요인과 안전상의 과제에 관심을 갖고 발굴·해결함으로써 도시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재난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주민활동을 통해 일정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상습적인 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그동안 하수도 정비, 펌프장 설치 등 방재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피해가 반복 되어 관 주도의 대책으로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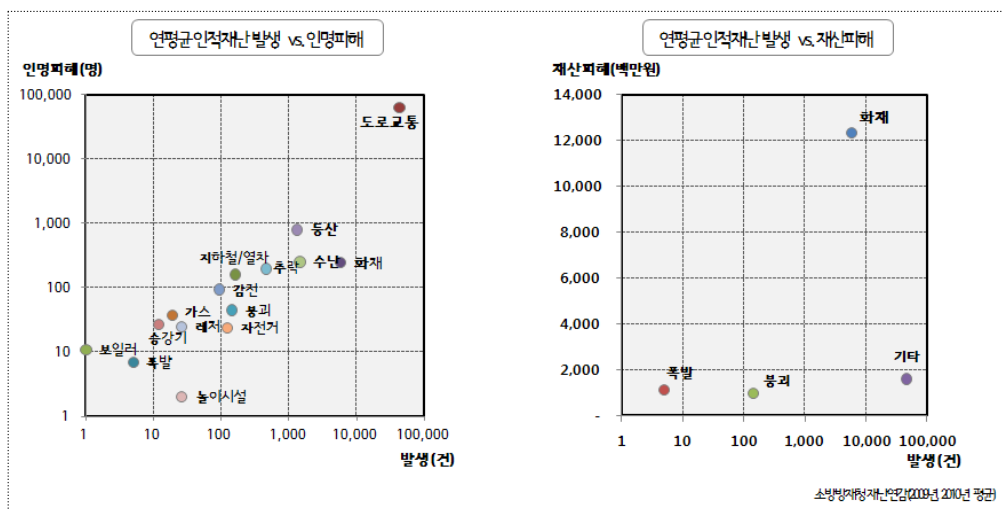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연도별 풍수해 추이

- 이러한 지역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근본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가지 토지이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재대응활동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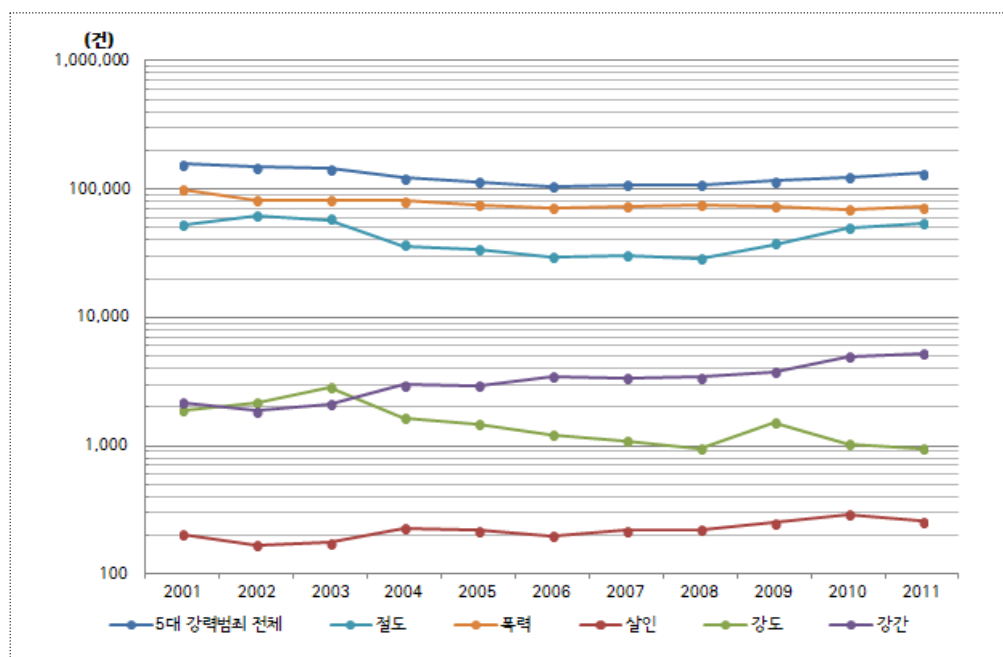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주요 상습침수피해지역(3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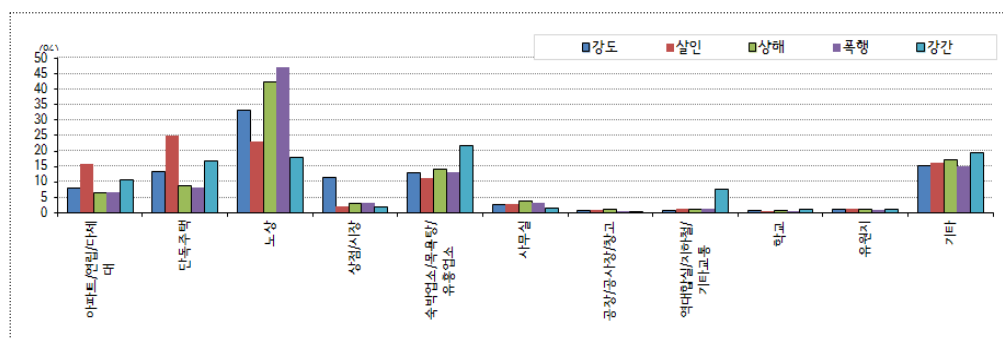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 현황

-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가장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교통사고, 화재, 등산사고, 수난사고 등은 시설개선사업과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안전의식과 역량을 키움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서울시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 또한 주민활동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



[그림 5] 서울의 5대 강력범죄 발생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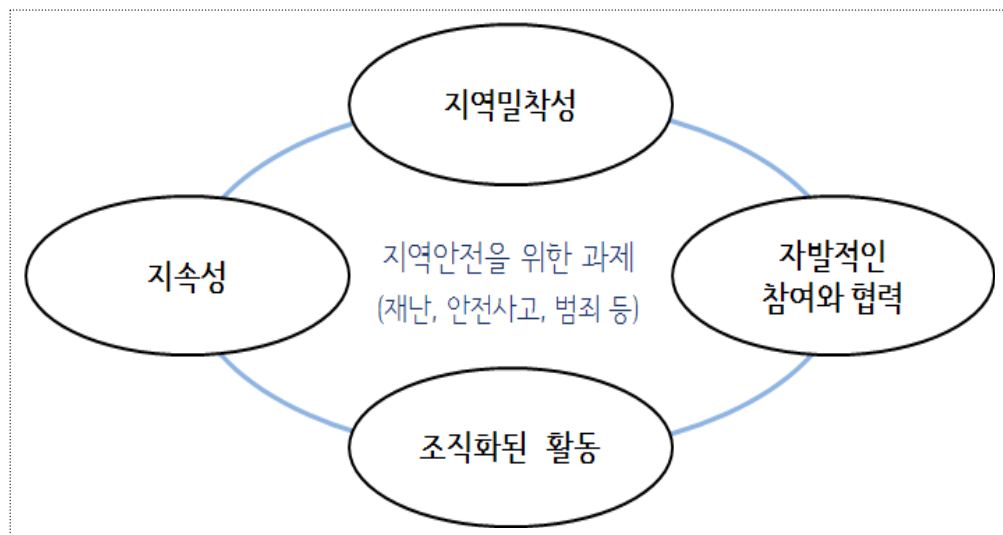


[그림 6] 강력범죄 발생장소 분포(2007~2009년)

안전마을 만들기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노력

□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과정

- 안전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지역사회의 재난 또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조직화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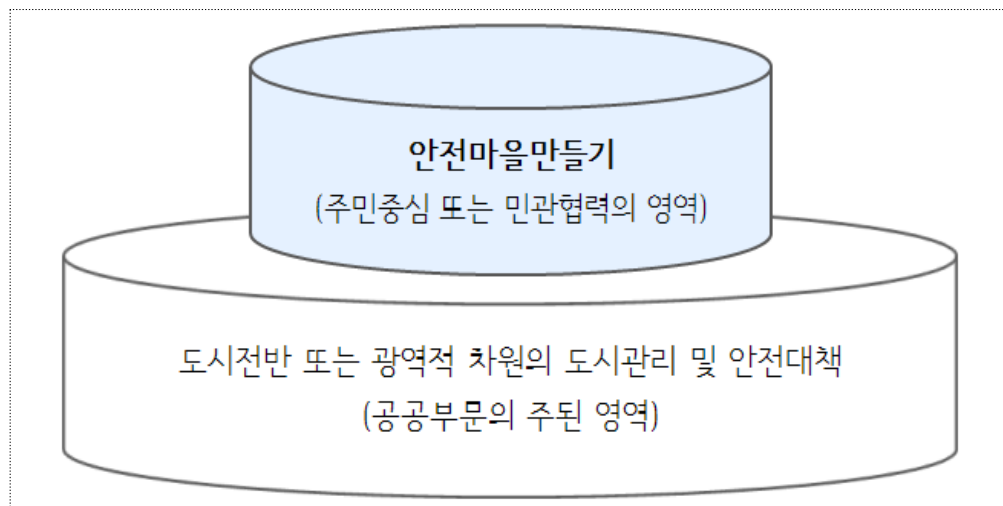


[그림 7] 안전마을 만들기의 주요 특징

□ 동 단위 이하 정도의 소규모 공간적 범위가 적절

- 안전마을 만들기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 사업추진의 지역밀착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인구와 환경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작은 공간단위가 적절
-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행정동, 법정동) 단위 또는 그 이하의 근린생활권, 초등학교권역, 주거블록 등 주민활동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범위가 가능

- 안전마을 만들기는 기존의 방재 및 안전관련 사업에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
 - 안전마을 만들기는 한정된 공간적(local) 범위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내지 주도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사업대상영역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한 영역에 한정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고유한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방재시설의 설치나 안전관련 사업은 안전마을 만들기의 주된 대상영역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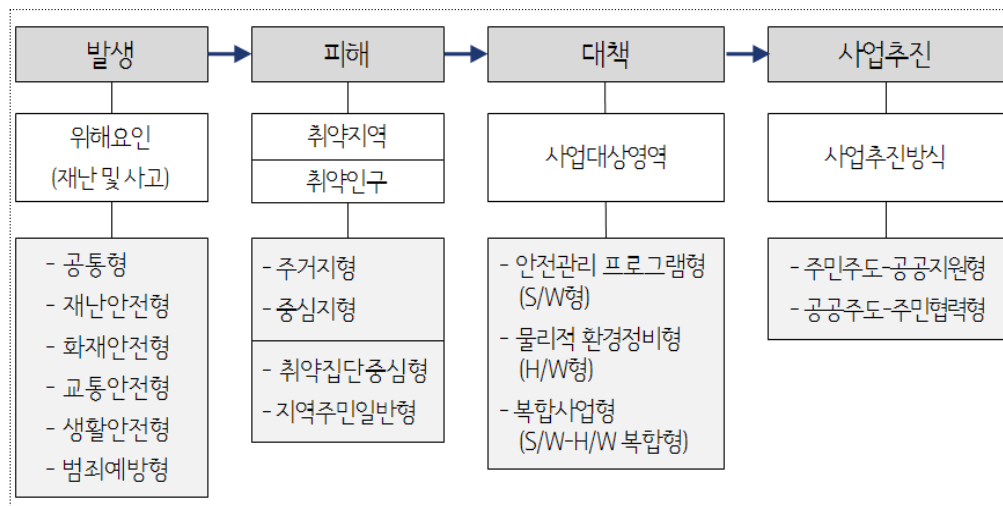


[그림 8] 보완수단으로서 안전마을 만들기의 성격

- 안전마을 만들기는 발생, 피해, 대책, 사업추진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
 -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특정 재난이나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공통형'을 비롯하여, '재난안전형'(자연재해, 인적재난), '화재안전형', '교통안전형', '생활안전형', '범죄예방형'으로 구분이 가능
 - 대상(취약)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눌 수 있고,

대상인구집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특정 취약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집단중심형'과 불특정 지역주민 전체에 걸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일반형'으로 구분이 가능

- 재난 및 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따라 사업비용, 사업의 지속성, 공공 지원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양쪽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사업형(S/W-H/W 복합형)'으로 구분이 가능
- 사업추진방식은 사업추진주체로서 누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주민주도-공공지원형'과 '공공주도-주민협력형'으로 구분이 가능
- 한편, 안전마을 만들기는 당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안전 및 방재를 위한 사업인지, 혹은 다른 사업의 일부로서 안전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협의' 또는 '광의'의 안전마을 만들기로도 구분이 가능



[그림 9] 안전마을 만들기의 유형화

II.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 국내·외 사례

안전 및 방재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 중

-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존재하나, 국내의 사업들은 주로 관 주도의 지원사업
 - 국내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인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사업, 소방방재청의 방재마을 시범사업 및 화재없는 마을만들기 등이 존재
 -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관련 사업들은 무수히 많은데, 예컨대, 범죄·재난 없는 중구, 화재 없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 등이 사례

<표 1> 도시 또는 구역기반의 안전·방재관련 국내·외 프로그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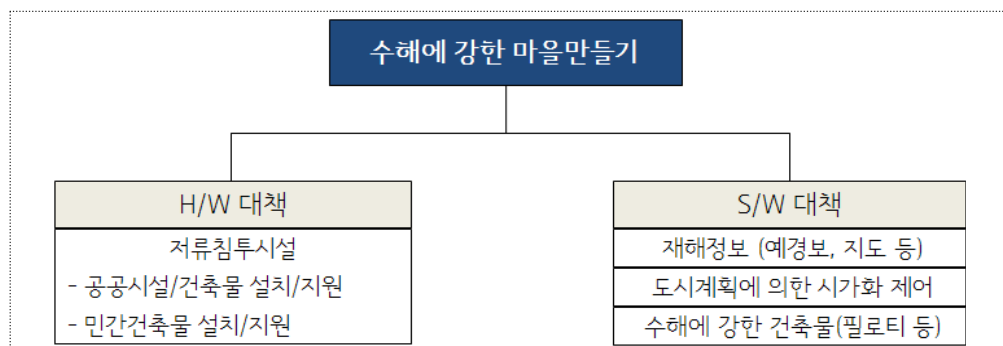
구분	지역	주요 사례
국내	중앙정부 지원	- 안전도시 시범사업(행정안전부) - 방재마을 시범사업(소방방재청) - 화재 없는 안전마을(소방방재청)
	지자체 안전/방재	- 범죄·재난 없는 중구(서울 중구) - 안전한 거리 조성,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지자체 다수) - 아동안전지도 만들기(과천시, 여성가족부 등), 기타
국제/해외	국제기구 공인 또는 지원	- Safe Communities(WHO) - Safer Cities(UN-Habitat)
	일본	- 방재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 수해에 안전한 마을만들기 -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기타
	미국, 유럽 등	-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또는 Disaster Resilient Communities(DRC) - Neighborhood Watch, 기타

- 국제기구에 의한 프로그램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Safe Communities가 있으며, UN-Habitat의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인 Safer Cities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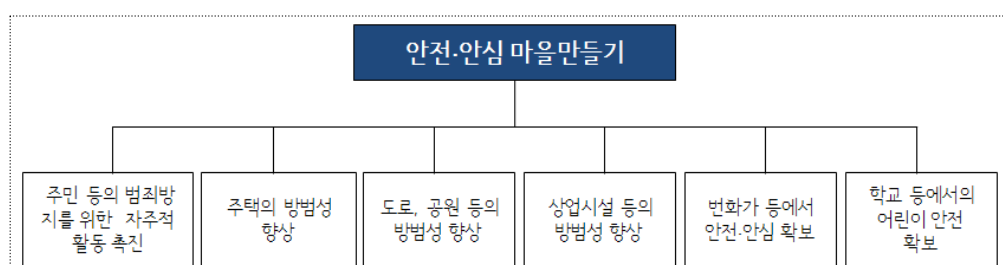
-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재난에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주민참여 기반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Resilient Communities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
-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방법활동 내지 프로그램으로 Neighborhood Watch가 널리 알려진 사례

□ 일본에서는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차원의 방재 및 안전 관련사업이 존재

- 안전 및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가 지자체들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방재마을만들기'는 주로 지진과 그에 따른 화재를, '수해에 안전한 마을만들기'는 풍수해를,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는 주로 방법과 생활안전을 대상으로 시행



[그림 10] 일본의 수해에 강한 마을만들기의 일반적인 대책



[그림 11] 일본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의 일반적인 구성체계



[그림 12] 지역사회 방법을 위한 Neighborhood Watch 운영지역의 표지판 사례

기존의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는 중복이 심하고 운영의 내실화도 필요

-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는 무수히 산재
 - 방재 및 생활안전분야에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고, 소방 분야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으며, 방범분야에는 자율방범대가 존재
 - 어린이 및 청소년분야에는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들이 특히 많은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학교보안관, 안전동지회, Walking School Bus, 녹색어머니회 등이 활동 중
 - 행정동 또는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등 도 안전·방재와 관련한 활동을 추진
 - 한편, 서울시는 현재 산재된 안전 및 방재관련 단체들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운영과 내실화 등을 위해 동 단위의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안전일꾼을 육성하는 중

<표 2> 안전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 현황

분야	단체명	최소지역단위	비고
방재	자율방재단	동	공공지원 있음
생활안전	안전모니터봉사단	구	-
소방	의용소방대	동	공공지원 있음
방법	자율방법대	파출소	공공지원 있음
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초·중·고등학교 등	-
어린이안전	학교보안관	초등학교	공공지원 있음
	안전동지회(교육청)	초등학교	공공지원 있음
	Walking School Bus	초등학교	공공지원 있음
교통안전	녹색어머니회	초등학교	-
재난구호	적십자단체	구	-
일반	주민자치위원회	동	공공지원 있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동(마을)	공공지원 있음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안전관련 사항은 아직 최소한의 수준

- ☐ 안전 및 방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서도 안전관련 사업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도 존재
 - 마을만들기 관련사업 중에는 지역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일부 포함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에는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방법을 위한 가로등 정비, CCTV 설치 등이 포함
 -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공모형 지원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는 도시 또는 마을의 한 유형으로 '안전·건강도시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건강도시형, 방재안전형, 무장애(barrier-free) 도시형으로 세분

- 그러나 시범사업 중에서 '안전·건강도시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직 전무

<표 3> 지역환경 정비 또는 지역주민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례

구분		사업	비고
서울시	서울휴먼타운	서원마을(강동구), 능안골(강북구), 선유골(성북구) 등	방범을 위한 가로등, CCTV 설치 등 사업 포함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시범마을)	도시(마을)유형으로 '안전·건강도시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도시형, 방재안전형, 무장애(barrier-free)도시형으로 세분	시범사업 중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실제 사업은 없음
해외	일본, 미국, 유럽 등	일본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미국·유럽 등의 Community Building 등	

- 산재된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묶어주고 주민주도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국내의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사업들은 여전히 관 주도로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미흡한 반면, 외국의 사례들은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을 강조
- 수많은 안전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들이 있으나, 서로 중복성이 심하고 실질적인 활동은 크게 미흡
- 따라서 안전마을 만들기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산발적인 주민활동도 지역사회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절실

Ⅲ. 안전마을 만들기사업과 주민참여방안

관 주도의 사업방식에서 민관협력방식으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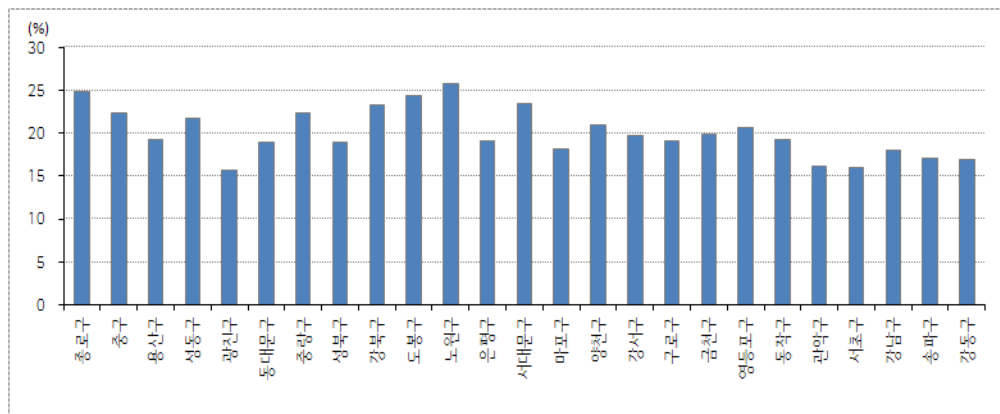
- ☐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틀 속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
 -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칭
 - 안전마을 만들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절차에 더하여 안전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행정부서(시, 자치구) 및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 주요 과제와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를 고려하여 주민참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를 위한 여건조성, 사업발굴, 본격적인 사업추진 등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에 따라 단계별 프로그램 전개 · 공공부문은 주민참여와 활동에 대한 촉진자·지원자로서 역할 수행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라 주민참여방식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영역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지원 ·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사업영역은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은 협조하는 방식으로 접근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한 절차 및 평가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재정적 지원은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선에서 최소화 · 상시적인 주민제안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하되,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주체의 자부담과 공공지원의 규모와 한도 설정 · 공공지원을 위한 평가체계는 중복성 검토와 타당성 평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지표를 설정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를 고려하여 주민참여를 전개

- 서울의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
 - 안전마을사업은 그 속성상 주민참여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
 - 서울은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약하고, 거주기간이 짧으며, 직주분리(職住分離)로 인해 주간인구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그림 13] 서울시 자치구별 10년 이상 거주가구 비율(2010년)

-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에 따라 소극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
 -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지역에서는 소극적 주민참여형태로 안전마을 만들기 여건조성 및 사업발굴을 중심으로 전개
 - 지역공동체 기반이 갖 형성된 지역에서는 민관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부문은 촉진자·지원자 역할을 수행

- 지역공동체 기반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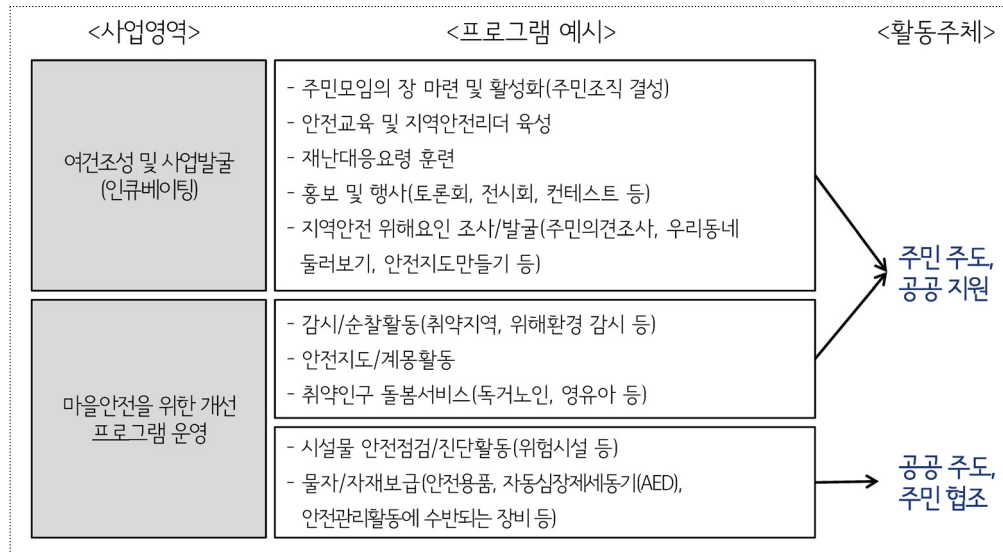
〈표 4〉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정도에 따른 안전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공동체 기반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경우	지역공동체 기반이 형성된 경우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경우
주민참여의 형태	여건조성 및 사업 발굴(인큐베이팅)	민관파트너십,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주민 중심의 자율적 참여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모임 활성화 - 안전교육 및 홍보 - 지역안전리더 발굴·육성 - 안전위해요인 조사 및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사례 공유 및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 - 비용이 적게 들거나 사업 추진이 비교적 용이한 소 규모 핵심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련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의 추진 및 전개 - 안전 이외의 지역이슈들과 결합하여 사업 추진 - 보다 광범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라 주민참여방식 차별화

□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은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개

- 여건조성 및 사업발굴(인큐베이팅)은 대부분 지역주민이 주된 활동주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
 - 지역안전상의 위해요인을 조사·발굴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위험지역이나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마을 둘러보기, 지역주민이 직접 작성하는 안전지도만들기 등
- 마을안전을 위한 개선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에 따라 다르나, 안전지도·계몽활동이나 감시·순찰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주된 활동주체가 되고 공공부문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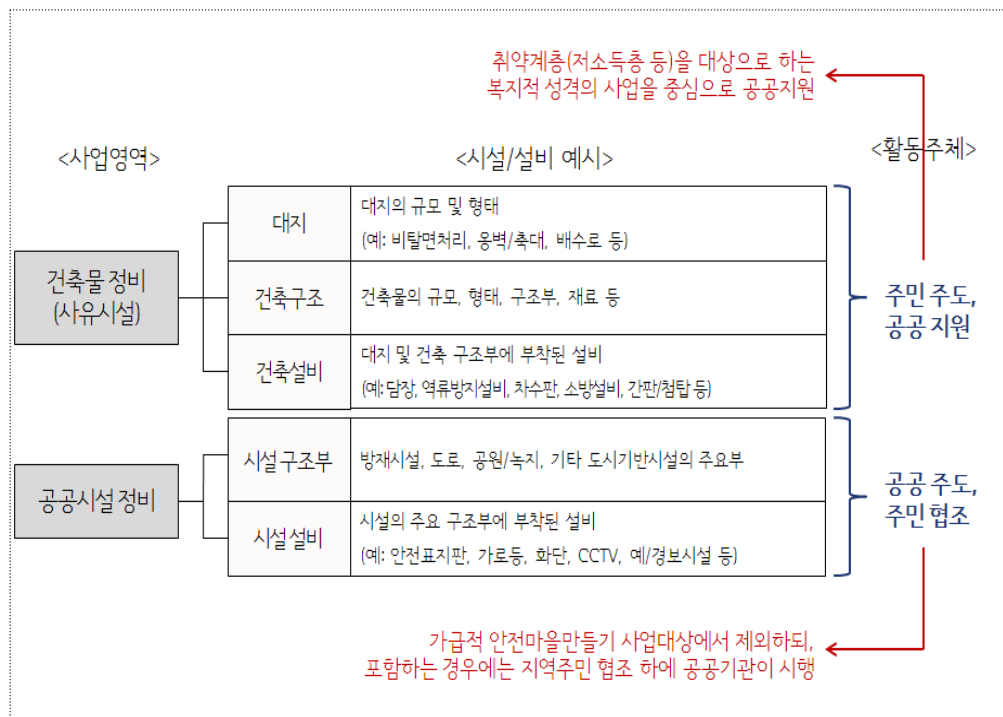


[그림 14]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유형과 주민참여



[그림 15]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 만들기 사례

-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되 주민은 협조
- 대상시설의 소유관계에 따라 공공과 주민의 주된 역할을 결정
 -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성격의 사업이 이에 해당
 -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사업에서도 주민들의 협조는 중요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정보제공이나 의견제시는 해당사업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



[그림 16]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사업대상과 주민참여

<표 5> '공통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 가능영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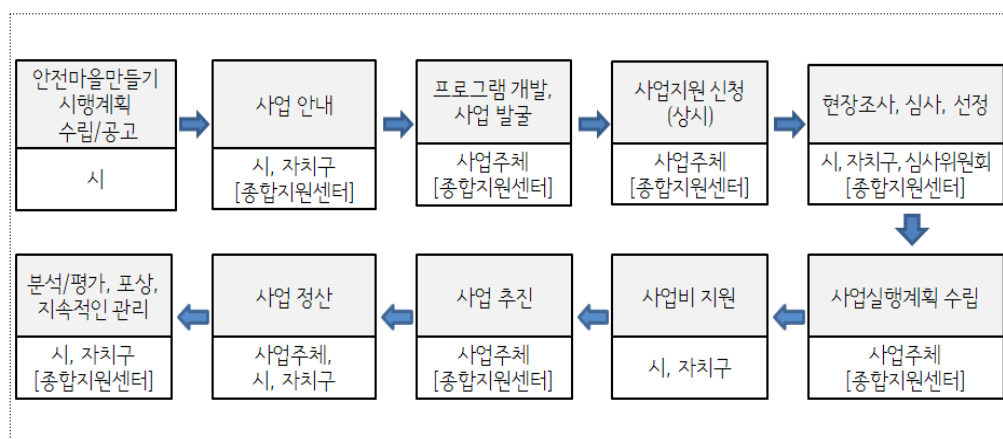
구분	주민참여 가능영역	참여방식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S/W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전을 위한 주민모임 활성화 및 주민자율조직 만들기 (현재 추진 중인 동단위 주민조직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용) - 유사 시 도움을 요청할 동네이웃 친구맺기 - 우리동네를 둘러보고 위해요소 조사·발굴하기 정례행사 또는 마을안전감시단 운영 -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 우리동네 마을안전지도(communit safety map) 만들기 - 안전취약자 돌보미 운영(문안전화, 무료검진, 안전점검, 법률서비스 등) - 전시회, 콘테스트, 안전문화거리축제, 공연, 토론회 등 행사 개최 - 취약계층 안심보험 지원 	주민 주도 공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 안전교육, 대응요령 프로그램 운영(지역별, 인구집단별, 시설별 등) - 안전마일리지제도 운영(보상, 포상제도 등과 연계) 	공공 주도 주민 협조
물리적 환경정비형 (H/W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안전점검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원대책 확대발전) - 취약지역 야간조명등 설치·개선 	공공 주도 주민 협조

<표 6> '범죄예방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의 주민참여 가능영역 예시

구분	주민참여 가능영역	참여방식
안전관리 프로그램형 (S/W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취약지역(다가구·다세대주택가, 유흥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대학가주변, 고시원 밀집지역 등) 밤길 안전을 위한 감시 및 순찰 -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계몽 - 유흥업소 등 유해업소 감시 및 순찰 - 정비사업지역(재개발), 빈집, 공사장 등 취약지역 점검 - 음식점, 유흥업소 밀집지역 상인 공동의 자율적인 건전한 술문화 조성 운동(지자체, 경찰, 지역상인단체 등 상호 간 협약체결) - 여성안전지도 만들기 - 방범순찰 표준근무매뉴얼 제작 - 방범순찰을 위한 제복·장비 등 지원 	주민 주도 공공 지원 (민·관협력)
물리적 환경정비형 (H/W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범초소 보강 - 자율방범순찰 운영지역 표지판 설치 - 범죄발생지점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사각지대 방범용 CCTV 보강 설치 - 주택가 골목길, 놀이터, 공원 등 취약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공공 주도 주민 협조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의 공공지원을 위한 절차 및 평가체계를 확립

- 공공지원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선에서 최소화
 - 예산이 적게 들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추진
 -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 쾌적성,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 공공지원은 '상시적인' 주민제안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
 - 마을만들기 지원대상은 사업주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인데, 주민은 3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
 - 지속가능한 주민활동과 프로그램이 중요한 만큼 재정투입 중심의 일회성 지원사업은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표준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사업은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이를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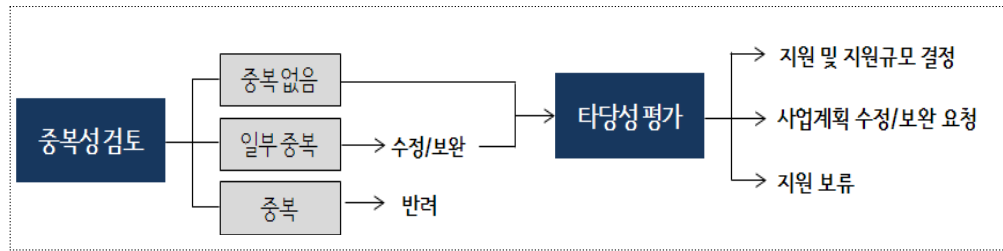
[그림 17]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절차

□ 사업영역과 대상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과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사업은 사업비 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므로 별도의 차등적인 지원기준이 필요
-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의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로 설정
- 물리적 환경정비형(H/W형) 사업은 공공시설 정비비용은 전액 공공이 부담하고, 사유시설(건축물 등) 정비비용은 일정비율(예: 총사업비의 10~30%) 이내에서 지원
- 안전관리 프로그램형(S/W형) 사업 내에서도 여건조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과 실제 위험해소를 위한 개선사업 간에도 차등적인 지원기준을 적용
 - 여건조성 및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은 최초 1년간 지원
- 지속성 사업은 최초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적용)하고, 매년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
 - 일회성 사업은 당해 사업기간에 한하여 지원

□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을 위한 평가는 중복성검토와 타당성평가로 구분

- 중복성검토는 당해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관련·유사사업이 있는지, 얼마나 중복되는지를 조사하여 사업내용의 조정, 사업계획 반려 등의 필요성을 검토
- 타당성평가는 중복성검토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



[그림 18]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을 위한 중복성검토와 타당성평가

□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

-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은 표준절차를 참조하되, 안전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적절성', '기대효과', '주민참여 및 역량'의 4개 평가기준에 총 1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유효 응답자수 107명) 평가기준 및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부여

<표 7>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기준 및 항목의 중요도 부여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중요도 점수(점)
1. 사업 필요성	1-1. 재난·사고위험 정도	11
	1-2. 지역주민 요구도	9
	1-3. 취약인구 비율	8
	소계	28
2. 사업계획 적절성	2-1. 지역특성 반영 정도	5
	2-2. 창의성 및 참신성	4
	2-3. 공익성	5
	2-4. 실현가능성	6
	2-5. 지속가능성	5
	소계	24
3. 기대효과	3-1. 안전개선효과	12
	3-2. 파급효과	10
	소계	22

<표 계속>

평가기준	평가항목	중요도 점수(점)
4. 주민참여 및 역량	4-1. 주민참여 정도	10
	4-2. 민관파트너십	8
	4-3. 자원확보	8
	소계	26
합계		100

신상영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93

syshin@si.re.kr